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정책지향에 관한 연구

임 의 영*
김 태 환**

〈目 次〉	
I. 서 론	III.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응
II.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 해석프레임 및 배제양태	IV. 이주노동자의 포용을 위한 정책적 지향
	V. 결 론

〈요 약〉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문제에 대응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어떠한 입장에서 이주노동자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글은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먼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적 반응을 해석하기 위한 프레임을 구성한다. 국가공동체의 공동이념, 관계형태, 상호작용원리를 기초로 내·외 프레임, 원·근 프레임, 그리고 상·하 프레임을 구성하고, 이 프레임들의 배제적 양태로 타자화하기, 거리두기, 그리고 차별하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에 내재된 배제적 양태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적 특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타자화하기에서 인정하기로, 거리두기에서 연대하기로, 차별하기에서 공정하기로의 전환은 배제에서 포용으로 가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제시된다.

【주제어】 이주노동자, 타자화, 사회적 거리, 차별, 인정, 연대, 공정】

* 제1저자: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eylim@kangwon.ac.kr)

** 제2저자: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수료(richkim224@naver.com)

논문접수일(2013.1.19), 수정일(2013.2.25), 게재확정일(2013.2.28)

I. 서 론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주는 노동인력의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들과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한국은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노동자 송출국에서 이입국으로 전환되었다(김병조, 2011). 이입국으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부족을 호소하며 저임금노동력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요구와 국내 노동력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정치적 요구 간의 적당한 타협지점에서 형성·집행되어왔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진일보한 고용허가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확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장고용기간을 단기화하여 정주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내노동시장을 보호하려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이주노동자정책은 경제적 필요성은 충족시키되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의 노동인력에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거나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적인 수용이나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초청된 배제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주의 동기는 이주민에 대한 이입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에서는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장려하면서 결혼이민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오늘 왔다가 내일 떠나는 방랑자들’이 아니라 ‘오늘 와서 내일 머무를 사람들’이기 때문에(Simmel, 1908: 143), 수용과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주노동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주노동자들을 사회적 수용과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가능성이나 필요성은 없는 것일까?

한국의 총인구는 2000년대에 들어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려할만한 것은 40세 이하 인구의 감소, 40대 인구의 정체, 50대 이상 인구의 증가에 의해 전체인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노동시장은 향후의 노동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2012년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80만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국내 총 취업자 2천 5백만 명의 3%를 넘어서는 수치이다(국가통계포털 KOSIS). 이주노동자들이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한숙, 2004). 따라서 향후 이주노동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상공회의소, 2012). 이러한 인구전망과 더불어 체류기간이나 사업장 이동 제한의 완화(이상학, 2002), 그리고 인권보호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외국

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9; Amnesty International, 2009).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볼 때, 성숙된 인권의 관념이 보편화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더욱 포용과 확대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Freeman, 1995; 이혜경, 2008).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장기체류 경향이 보편화될 것이 자명하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 혹은 사회적 통합의 정당성과 방법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프레임과 배제적 반응의 양태를 살펴보고, 그에 기초해서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러한 관찰을 토대로 이주노동자의 포용적/통합적 수용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지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II.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 해석프레임 및 배제양태

1. 프레임 구성의 근거

고유한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체에 낯선 사람들이 유입될 때, 과연 그 공동체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실체 혹은 본성이 결여된 사람들을 ‘이방인(stranger)’이라 부른다. 이방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가령 자원이나 권력의 분배를 둘러싼 경쟁자나 동맹자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배척대상이나 구원자로 인식될 수도 있다. 때로는 이방인에 대한 상반되는 인식이 공존할 수도 있다. 즉,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동맹자로 혹은 배척대상이면서 동시에 구원자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Karakayali, 2009). 이방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는 공동체의 속성이나 상황 그리고 이방인의 유입동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 역시 이방인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은 공동체의 속성이나 상황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유입동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유입동기는 경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 변수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반응을 해석하기 위한 프레임은 공동체의 속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M. Taylor(1982)는 공익의 공동생산과정에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와 유인이 불가피하다는 Olsen(1965)의 주장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의 공동체론은 공동체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공동체는 세 가지 속성을 갖는다(1982: 25-33). 첫째, 공동체에는 ‘공유된 신념과 가치’가 존재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정신적으로 묶어주는 ‘공동이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구성원들 간에는 ‘직접적이고 다면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공동체에는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특정한 ‘관계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구성원들은 ‘호혜성’의 규범에 따라 상호작용을 한다. 공동체에는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규율하는 특정한 형태의 ‘상호작용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M. Taylor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공동체는 소규모공동체이다.

우리는 소규모공동체의 속성에 관한 M. Taylor의 논의에서 공동이념, 관계형태, 그리고 상호작용원리를 공동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소규모공동체가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적 반응이다. 따라서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국가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해석하기 위한 프레임과 배제의 양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공동이념: 내-외 프레임 → 타자화하기

1) 국민적 정체성의 의미

소규모공동체는 공동이념으로서 특정한 신념과 가치를 갖는다. 공동체구성원들은 신념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communal identity)을 갖게 된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신념과 가치는 일반적으로 신앙이나 공동체의 기원 신화를 토대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식이나 축제의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 공유된 신념과 가치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킨다.

대규모의 국가 역시 공동이념으로서 공유된 신념과 가치를 갖는다. 국가의 구성원들은 신념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민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갖게 된다. 국가는 두 계기를 통해 국민을 동질화한다. 첫째, 정치공동체로서 국가는 구성원들을 일정한 영토적 경계 안에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 동질화 한다. 정치적 이념과 개인의 기본권은 국가의 기본법(헌법)에 규정된다. 둘째, 민족공동체로서 국가는 구성원들을 혈통과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민족으로서 동질화한다. 구성원들은 다양한 사회적 소통메커니즘을 통해서 민족을 상상한다(Anderson, 2003). 하나의 정치 공동체 안에 다수의 종족 공동체(ethnic community)가 공존할 수도 있는데, 이때 민족주의는

종족적 다양성을 극복하는 이념적 장치로 작동한다. 상상된 민족 공동체 안에 복수의 정치 공동체가 존재하게 된다면,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리해 보면, 국민적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토, 공동의 신화와 역사적 기억, 공동의 문화,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체계, 공동의 경제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mith, 1991: 14).

2) 타자화의 메커니즘

국민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국민의 이질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까?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은 범주화(categorization)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정신은 범주들의 도움을 받아 생각한다.(…)일단 범주들이 형성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 것들에 의존해서 예단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피할 수 없다(Allport, 1954: 20).” 문제는 이러한 범주에 기초한 사고는 인식상의 왜곡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데 있다. 우리는 이것을 ‘편견(prejudice)’이라 한다. 전형적인 편견의 예들을 보자. 범주들 내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범주들 간의 차이는 큰 것으로 과장하여 인식하는 경우이다 (Plous, 2003). 가령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노동자들 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내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 간의 차이는 큰 것으로 과장하여 인식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예는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에 대한 범주적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외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동질적인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외집단 동질화 효과(outgroup homogeneity effect)’라 한다(Linville, 1998). 가령 이주노동자들의 국적이나 민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편애 때문에 다른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내집단 편향(ingroup bias)’이라 한다(Aberson, Healy, & Romero, 2000; Brewer, 1999).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편견은 다른 집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집단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고정관념화(stereotyping)라 한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정관념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정관념화가 대상에게 ‘더러운 이름 붙이기(stigma)’의 형태를 띠게 되면 (Link & Phelan, 2001), 타자화(othering)가 진행된다. 타자화는 인식 대상들의 다른 점(차이)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부정적인 속성들과 연결시켜, 우등한 ‘우리’와 열등한 ‘그들(타자)’을 분리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와 그들 간의 권력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Staszak, 2008).

국가의 공동이념은 구성원들을 결속시킴으로써 국민적 정체성의 근원이 된다. 국민적 정체성에 대한 관념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인식의 차원에서 편견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응의 주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에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내-외 프레임(in-out frame)이 내재한다. 내-외 프레임은 상징적으로 우리-그들, 같음-다름, 익숙함-낯섦 등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다. 내-외 프레임이 부정적으로 혹은 혹은 혹은 곡된 형태로 작용하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을 타자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관계형태: 원-근 프레임 → 거리두기

1) 간접적·일면적 관계형태의 특성

소규모공동체의 관계형태는 직접적-다면적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는 대면적(face-to-face)이다. 대면관계는 단순히 서로의 얼굴을 안다는 좁은 의미에서부터 사람들이 서로의 인생사를 함께 공유한다는 넓은 의미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를 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는 다면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규모공동체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인격적인 것이라 하겠다. Durkheim(2012)의 연대 개념에 따르면, 소규모공동체는 기계적 연대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소규모공동체와는 달리 국가공동체의 관계형태는 간접적-일면적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는 간접적이다. 사회적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는 분화된 사회구조와 다양한 소통수단들이다.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매개들이 요구하는 측면들만을 서로에게 보여주거나 보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계는 일면적이다. 그리고 사회구조는 세분화되고 서로 밀접하게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는 기능적인 것이라 하겠다. Durkheim의 연대 개념에 따르면, 국가공동체는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사회분화로 서로를 보완하는 다양성이 연계된 유기적 연대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그렇다면 사회구조와 거기에 내재된 소통방식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간접적-일면적 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시키게 될까?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이입국의 생산구조에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주한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네트워크에 기능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미숙련공으로서 노동의 수직적 분업체계에서 최하위 계층을 형성한다. 일반 국민들이 정치적 네트워크,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적 네트워크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경제적 생산네트워크에 지극히 제한된 방식으로 연계된다. 물론 생산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정치적,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계되지 않고는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이 네트워크의 확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내국인들이 네트워크에 연계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는가 하는데 있다.

2) 거리두기의 메커니즘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는 이러한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안내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교류하고자 하는 정도를 말한다. 사회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첫째,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친밀감(sense of intimacy)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소가 있다. 친밀감이 클수록 수용과 교류의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친밀감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거리는 사회심리적 거리 혹은 감정적 거리라 할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이 따르는 법과 도덕 혹은 종교적 계율 같은 규범적인 요소가 있다.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수용과 교류의 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정도가 사회적 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작용 요소에는 공간적인 접근가능성과 관련된 요소들도 포함된다. 실질적인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서로에 대한 수용과 교류의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문화적·관습적 유사성의 정도가 사회적 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유사성이 적을수록 서로에 대한 수용과 교류의 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Karakayali, 2009).

국가공동체에서의 관계는 형태상으로는 간접적, 일면적이며, 내용상으로는 기능적이다. 그러한 관계형태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단단하게(tightly) 혹은 느슨하게(loosely) 연계된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생산네트워크에서는 단단하게 연계되지만, 사회적, 정치적 네트워크에서는 단절되거나 느슨하게 연계된다. 연계의 단단함과 느슨함을 나타내는 개념은 사회적 거리이다. 사회적 거리에는 원-근 프레임(far-near frame)이 내재한다. 원-근 프레임은 상징적으로 연계강도의 약-강, 연계빈도의 소-다, 연계범위의 소-다 등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다. 원-근 프레임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리두기(distancing)가 발생한다.

3. 상호작용원리: 상-하 프레임 → 차별하기

1) 이익에 기초한 상호작용

소규모공동체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인도하는 원리는 호혜성(reciprocity)이다. 호혜성은 대체적으로 단기적 이타주의와 장기적인 자기이익의 결합 형태를 취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돋게 되면, 너는 언젠가 나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에 따라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호혜성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는 공동체를 매개로 보장된다. 만일 호혜

성의 규범을 어기게 되면, 공동체에서의 비난과 모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삶은 기본적으로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유지된다.

국가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인도하는 원리는 이익(interest)이다. 이익추구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된다. 국가공동체 안에는 이익추구와 관련된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다. 사유재산권, 자유경쟁,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보장은 기본적인 장치들이라 하겠다. 경제적 삶을 인도하는 이익추구는 정치적, 사회적 삶을 인도하는 보편적인 원리로 확장된다.

2) 차별의 메커니즘

그렇다면 이익추구를 위해 경쟁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될까? 일반적으로 이익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 때문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들을 굳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극단적으로는 피지배집단에 대한 편견을 지 배집단의 이익을 위한 가면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한다(Blumer, 1960). 때로는 편견에 기초한 차별과 이익에 기초한 차별을 구분하고,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경우만을 이익에 기초한 차별로 보기도 한다(Antonovsky, 1960). 특히 우생학과 인류학을 동원한 인종적 우열에 대한 주의주장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구적인 의식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차별은 대상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본질로 한다. 그러나 모든 차별이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Feagin & Eckberg(1980)는 차별의 의도여부, 그리고 차별이 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의 차별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단독적 차별(isolate discrimination)이다. 이는 지배집단의 개인이 피지배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로 사회에서 그러한 행위가 제도적으로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물리적 폭력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주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는 소집단 차별(small-group discrimination)이다. 이는 지배집단의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가 소집단을 형성하여 피지배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로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 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해가 극단적이지 않다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이다. 폭력집단을 만들어 이주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린치를 가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는 직접적인 제도적 차별(direct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이다. 이는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피지배집단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제도화하는 경우이다. 가령 모든 사람에게는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법적으

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넷째는 간접적인 제도적 차별(indirect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차별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공식 언어인 한글로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차별적이라 할 수 없지만, 한글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차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상호작용을 인도하는 보편적인 원리는 이익이다. 이익추구는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한다. 이주노동자는 이익추구 경쟁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만 기회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익추구의 기회와 관련해서는 상-하 프레임(up-down frame)이 내재한다. 상-하 프레임은 상징적으로 노동능력의 숙련-미숙련, 노동생산성의 고-저, 계급적 지위의 고-저 등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다. 상-하의 프레임이 부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차별이 일상화된다.

지금까지 공동이념, 관계형태, 상호작용원리를 기준으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프레임과 그 프레임을 통해 부정적인 인지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배제적 반응들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프레임은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배제적 반응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 해석 프레임

	소규모공동체	국가	해석 프레임	배제적 반응
공동이념	공동체적 정체성	국민적 정체성	내-외	타자화하기
관계형태	직접적, 다면적	간접적, 일면적	원-근	거리두기
상호작용원리	호혜성	이익	상-하	차별하기

III.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응

1. 내-외 프레임의 배제적 작동: 타자화하기

1) 한국사회의 국민적 정체성의 특성

국민적 정체성은 한편으로는 정치이념을 공유하고 균등한 기본권을 가진 정치공동체의 일원임을, 다른 한편으로는 협통,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임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의 국민적 정체성 역시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주권자로서 국민이 향유할 수 있고 부담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주권자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담지자가 된다. 국적이 국민적 정체성의 중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에서 민족개념은 내용적으로 국민적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헌법의 전문의 ‘역사’, ‘전통’, ‘조국’, ‘동포애’, ‘민족의 단결’ 등과 같은 표현들은 한국의 정치공동체에 민족주의 이념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에서 전형적으로 표출된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출발한다. 일제강점에 의해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민족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정치공동체로서 안으로는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일제에 대한 전투적 저항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민족주의는 민족의 기원을 단군신화에서 찾아 유구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명맥을 유지한 민족적 저력을 확인하고, 그 전통 속에서 일제에 대한 단결된 저항을 추동하는 이념이었다(허동현, 2009; 김현숙, 2006; 정영훈, 1994). 해방 이후 분단과 함께 민족주의는 통일을 정당화하는 ‘규범적 민족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헌법전문에 ‘조국의 통일’은 민족적 과제로 제시된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민족주의는 조국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발전론적 민족주의’(윤인진, 2007) 혹은 ‘도구적 민족주의’(김동노, 2010)로 전개된다. 1990년대 세계화담론이 펴지면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한홍구, 2002; 윤건차, 2002). 한편에서는 세계화에 발을 맞추어 ‘열린 민족주의’(조민, 1994)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허구적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벗어던질 것을 주장하는 ‘탈민족주의’(임지현, 1999)의 길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전들은 담론 차원에서 저항적 민족주이나 도구적 민족주의에 내재된 비장함이나 경직성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과정을 보면, 국민적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점차 민족관념이 약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이주노동자에 대한 타자화 경향성

정치공동체적 속성과 민족(종족)공동체적 속성은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Hochman et al.(2008)은 출생과 혈통을 강조하는 종족적 요인의 강도와 법-제도 존중, 소속감, 국적소지, 국가발전에 기여 등을 강조하는 시민적 요인의 강도를 기준으로 국민적 정체성 인식유형을 혼합형(시민 강-종족 강), 종족형(시민 약-종족 강), 시민형(시민 강-종족 약), 다원형(시민 약-종족 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분류에 따른 연구들에 의하면, 혼합형이 이주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송영호(2011)가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라 한국인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혼합형 79.2%, 종족형 7.3%, 시민형 9.3%, 다원형 3.9%로 혼합형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배타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타적 반응은 일차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 강화, 즉 타자화하기로 나타난다.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는 제도, 매체, 그리고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편집되고 해석되어 ‘상상적 관념’(유명기, 2002)으로서 존재한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상상적 관념은 타자화하기로 진행된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타자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불법자로서 타자화된다. 실제로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체류자로서 단속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주노동자들은 매체를 통해 ‘불법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되면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연수생신분을 획득함으로써 불법의 딱지를 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산업연수생은 신분상으로 아이러니하다. 산업연수생은 작업장에서는 분명 노동자인데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유령’같은 존재(유명기, 1997),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한건수, 2003)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보니 불법자의 이미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 작업장에서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받는 부당한 대우를 피해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불법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양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고,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피해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례는 여전하였다. 이렇게 불법자로서 이주노동자들의 이미지는 산발적으로 보도되는 외국인 범죄들과 결합되어 위협적인 것으로 재구성된다.

둘째, 이주노동자는 계으른 ‘노예’로서 타자화된다(한건수, 2003: 167; 설동훈, 2002).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가난한 국가 출신들이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미숙련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주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전담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의 수직적 분업에서 최하층에 위치한다.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가난, 미숙련, 최하층의 단어들은 그들을 현대판 ‘노예’로 타자화하는 경향성을 촉진한다. “한국인 시험관이 웃웃을 벗기고 한사람씩 입을 벌리게 하여 치아 상태를 훑어본 다음, 손으로 어깨나 팔꿈치를 세게 눌러보았다. 시험은 그것뿐이었다(유명기, 1995: 69-70).” 노예의 이미지에 충실하지 않은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민무숙(2010: 14)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계으르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 ‘걸핏하면 출근하지 않고 생산현장의 규율을 어기는 사람’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은 ‘더러운 존재’로 타자화된다(한건수, 2003: 170). 일반적으로 매체보도는 에이즈를 동성애자나 외국인과 연결시키고 있다. 매체에서 보도하는 아프리카에 만연하는 에이즈의 실상은 동정의 대상이지만, 가까이에 있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위협적으로

인식된다. 외국인들 특히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은 병을 옮기는 ‘더러운 존재’로 치부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에이즈 병원균을 전파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에서 내-외 프레임을 통해 내국인-이주노동자는 준법-불법, 주인-노예, 숙련-미숙련, 부-기난, 깨끗함-더러움, 우리-그들 등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고, 이들은 우등-열등의 대립 항으로 수렴된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는 내-외 프레임이 배제적으로 작동하여 타자화가 이루어진다.

2. 원-근 프레임의 배제적 작동: 거리두기

1) 한국사회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

네트워크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필연적인 존재방식이다. 네트워크는 정보와 자원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흐르는 경로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네트워크상의 위치와 기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네트워크에는 사회의 분화된 구조에 상응하여 형성되는 구조기반 네트워크(structure-based network)와 사회의 일차적인 인간적 관계에 상응하여 형성되는 정서기반 네트워크(affection-based network)가 있다. 정서기반 네트워크는 주로 전근대적인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발전하며, 구조기반 네트워크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를 배경으로 발전한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경제발전을 통해서 고도로 분화된 사회구조를 발전시키게 된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구조기반 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발전과 더불어 전근대적인 정서기반 네트워크가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발달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고도의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구조기반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서기반 네트워크가 더불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서기반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고도화하는 것이 약화시키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보상적 경험 때문일 것이다(이종범, 1986). 가령 가족주의는 일제, 한국전쟁, 독재정치체제,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조혜정, 1985; 김동춘, 1998). 공공영역에 대한 불신이 피로 연결된 가족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대체되고, 가족중심의 태도와 사회관계를 가족관계로 확장하는 의제적 가족주의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이승환, 2004; 이황직, 2002). 한국사회에서 정서기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은 혈연, 지연, 학연이다. 한국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들이 형성되고 경계선이 그어져있다. 혈연, 지연은 주어지는 것인 반면, 학연은 획득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을 통한 열정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사회에서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

2)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리두기

정서기반 네트워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구조기반 네트워크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 한국사회 안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경제적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다. 그들은 단순히 외국인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인 혈연, 지연, 학연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필요에 의해 생산네트워크에 초청되었으나, 사회적 네트워크에는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윤인진 외(2009)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조사대상 중 26.3%가 ‘관심 있다’고 응답한 반면, 34.3%가 ‘보통이다’, 그리고 39.4%가 ‘관심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친밀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못사는 출신국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28.1%, 선진국출신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44.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출신국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친밀감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출신국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의 차이는 황정미 외(2007)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4점 척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 2.08, 북한이탈주민 2.28, 일본인 2.53, 동남아시아인 2.77, 중국인 2.7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무관심하고, 별로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 등 네 개의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김상학(2004)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 순으로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서도 역시 응답자들은 동일한 순서로 거리감을 표현했다. 소수자집단으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고국 사람들과 폐쇄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영란(2008)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이 개인적인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상대를 묻는 질문에 고국친구들 85.8%, 다른 나라 친구들 28.5%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고국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개방형 네트워크보다는 폐쇄형 네트워크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병우(2009)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이주노동자들은 지역사회에서 한국인과의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신들의 정착생활에 지원을 해주는 사회단체모임(26.9%), 자국인들의 모임(21.1%)이나 외국인 친구모임(12.7%) 등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참여단체가 없다는 응답자도 22.8%나 되었다. 게다가 공간적으로 일터와 생활공간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제도상 사업장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노동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간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고도로 발달된 정서기반 네트워크의 폐쇄적, 배타적 성격,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이주노동자들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접근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보인다. 이처럼 원-근 프레임이 부정적으로 작동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배제하는 거리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상-하 프레임의 배제적 작동: 차별하기

1) 한국사회의 자본-노동관계의 특성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는 사유재산권과 이익추구를 위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고용관계에 기초한다. 자본가는 가능하면 생산비용, 특히 임금을 최소화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노동자는 작업조건을 개선하고 많은 임금을 받는데 관심이 있다. 따라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자본가는 노동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생산설비의 자동화를 추진하거나 노동시장을 분절화함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Bonacich, 1972).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기업들의 정책적 요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현재까지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왔다. 법-제도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정부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활동력은 매우 약화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자본의 절대적 우위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장혜연, 2010; 윤윤규, 2010). 사업장에서의 단독적 차별이나 소집단차별 현상은 주목할 만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노동정책에는 ‘제도적 차별’이 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그렇다면 이익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기업과 내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매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자로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은 경쟁자로 보기 어렵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2012)가 (주)마켓비전 컨설팅그룹에 의뢰하여 3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고용이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1.3%가 ‘내국인근로자가 기피하는 일자리이므로 내국인 일자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임금 및 작업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79.9%가 ‘내국인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일자리 대체효과나 임금 및 작업조건에 대한 영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적으로 내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경쟁자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동연구원(2007: 40-41)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322개 사업장의 500명의 내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국인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비해서 이주노동자의 고용이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 2001년과 2003년 이주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내국인 노동자의 80%선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27). 같은 조사에 의하면, 5점 척도에서 내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시간 3.21점, 작업량 2.98 점, 임금 2.62점, 생산성 2.67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25-27).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작업량은 비슷하고,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해서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임금 및 작업조건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¹⁾

이주노동자는 기업에 의해 동맹자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동맹의 성격은 ‘평등이 없는 동맹(alliance without equality)’이다. 평등이 없는 동맹은 기업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한 사업장의 부당대우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쟁자로서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노동의 계층화를 통해서 내국인 노동자의 위기의식을 완화시킨다. 그것은 암묵적인 국적 동맹을 바탕으로 내국인 노동자가 이주노동자를 공동의 관리대상으로 인식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의 근본적인 대립구조가 내국인(기업과 노동자)과 이주 노동자의 대립구조에 의해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계층구조상 이주노동자는 ‘저층계급(underclass)’에 해당된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의 계층구조 상에 가장 하위에 위치하여 최악의 착취와 저임금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계층구조상 ‘계급 이하의 계급(class under class)’이라 하겠다(Gray, 2004).

1)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약 80만 명 가운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가 26만5000명으로 전체의 33.4%나 되었다. 그리고 월 임금은 100만~200만원 미만이 51만9000명(68.4%), 100만원 미만이 5만2000명(6.8%)으로 3명 중 2명이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KOSIS).

정부의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의 차별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이동은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다(25조). 이 조항은 사용자에게 전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일이 쉽지 않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 기간은 3년 이내(18조), 동법에 따른 재취업은 출국 후 6개월 이후(18조의3),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18조의2), 재고용의 경우는 출국 후 3개월 이후(18조의4) 등 체류기간을 제한함으로써, 5년간의 계속적인 체류를 요구하는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에 대한 접근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된 이주노동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떠한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를 방조할 가능성이 크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9).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나(22조), 사업장 이동제한과 체류기간의 제한,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명시적 조치의 미비 등은 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간접적인 제도적 차별의 정후를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이익의 분배를 둘러싼 경쟁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상-하 프레임을 통해서 자본-노동의 계층관계, 그리고 노동자 내부의 내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계층관계로 재구성된다. 자본은 필요에 따라 내국인 노동자를 동맹으로 하여 이주노동자를 관리하거나,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쟁을 통해 노동자 전체를 관리하는 선택지를 활용하여 이익추구에 있어서의 차별하기가 심화될 수 있다.

IV. 이주노동자의 포용을 위한 정책적 지향

1. 정책적 지향의 전제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를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면서 동시에 잠재적 추방의 대상으로 본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 기조는 배제적이라 하겠다. 배제적 성격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타자화하기, 거리두기, 그리고 차별하기의 형태로 표출된다. 그러나 이주노

동자의 경제적 기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경향,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 경향,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적 태도는 한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이주노동자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두 가지 전제를 세우고자 한다. 첫째는 이주노동자의 통합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단순히 배제와 포용의 이분법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용은 ‘배제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Cameron, 2006: 397). 그렇게 되면, 포용정책은 단순히 배제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만다. 포용과 배제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포용과 배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가령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영역에서는 포용되고, 다른 영역에서는 배제될 수도 있다(Jackson, 1999: 129). 또한 오히려 배제가 포용을 산출할 수도 있다. 가령 배제된 집단이 자신들보다 더 약한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포용을 획득할 수 있다(Jackson, 1999: 135). 이러한 점에서 단순한 배제-포용 이분법에서 탈피해서 배제와 포용의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적극적으로’ 통합정책의 방향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는 단순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내재된 배제적 경향을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은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장의 논의는 타자화하기, 거리두기, 차별하기의 배제적 경향성을 인정하기, 연대하기, 공정하기의 포용적 경향성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을 한국사회에 내재된 문제와 연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틀은 <표 2>와 같다.

〈표 2〉 프레임의 포용적 전환

배제	프레임	포용
타자화하기	내-외 프레임	인정하기
거리두기	원-근 프레임	연대하기
차별하기	상-하 프레임	공정하기

2. 타자화하기에서 인정하기로: 시민형성적 다문화주의를 향하여

타자화하기는 내-외 프레임이 내집단과 외집단을 나누어 외집단의 인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내-외 프레임이 나와 너의 관계로 재설정됨으로써 너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우리’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포용적 전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자화에서 인정으로의 관점변화는 다문화주의를 통해서 시도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사용된다(Bloemraad, 2011). 첫째,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인구구성상의 변화를 기술하는 용어이다. 그것은 이민에 의해 문화적, 인종적, 종족적 차원에서 인구구성이 다양화되는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외국인주민은 14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비중은 약 41%에 해당된다(연합뉴스, 2012.8.9). 인구구성상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둘째, 다문화주의는 정치철학적 용어로 사용된다. 정치철학적으로 다문화주의는 경직된 평등주의와 개인주의에 대립적이다.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곧 소수자의 권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을 독립된 실체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혹은 공동체적 연관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회적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소수자를 인정하고, 다원주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집단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키워드는 ‘인정’이다(C. Taylor, 1992).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다. 셋째, 다문화주의는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다문화주의의 정치철학적 이념은 구체적인 공공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다문화정책의 핵심은 문화 간 소통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와 교육이 중점적인 정책문제가 된다. 이주민들에게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국인들에게는 전통적인 언어에 내재된 편견을 제거하는 작업(potitical correctness)과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출발은 소통을 위한 조건을 구축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다문화정책모형은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이다(Martiniello, 2002). 차별적 배제모형은 이민자의 영주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의 차별대우를 유지한다. 동화모형은 국민으로서 동화과정을 지원하고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한다. 다문화주의모형은 소수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며 적극적 조치 등을 취한다. 한국은 정책적으로 어느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부차별로 그리고 정책대상별로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박진경, 2010).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모형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배제모형이 적용되고 있다. 동화모형은 이주민의 본래적 정체성이나 문화를 포기하고 한국의 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폭력적이다. 차별배제모형은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역시 폭력적이다. 동화모형과 차별배제모형은 정책이 반대방

향으로 이루어지지만 본질적으로 배제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인권과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다문화주의모형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한국사회에서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다문화주의의 성패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다. 다문화주의모형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가령 문화적 상대주의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집단의 문화가 단순히 상품이나 구경거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추구해야 할 다문화주의는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 첫째,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자. 상대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난 다문화주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를 ‘시민형성과정’으로 보는 것이다(Kymlicka, 2012: 8). 인권이념의 보편성에 기초해서 민주적 시민성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는 것이다. 국민적 정체성을 고착된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행적 기획(transformative project)’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집단 간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면서 동시에 각 집단의 전통 안에 존재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인권의 보편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일차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공수진 외, 2011). 둘째, 이민자들의 유입과 관련해서는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때, 이주민에 대한 위협감이나 불신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에 고려될 것은 한 국가나 한 종족의 집중적인 유입보다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종족을 유입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들의 경제적 공헌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주노동자 정책의 추진 체계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외교부와 노동 관련 부처에 한정된 추진체계를 넘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3. 거리두기에서 연대하기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건전성을 향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원-근 프레임의 배제적 작동은 거리두기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산다는 것은 고도로 분화된 체계의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구조기반 네트워크가 혈연, 지연, 학연과 연관된 정서기반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서기반 네트워크에 어떤 방식으로 접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구조기반 네트워크상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정서기반 네트워크는 사실상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산물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은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가입조건에 따라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거리는 두 개의 국민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과제는 정서기반 네트워크가 구조기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는 시민성기반 네트워크(citizenship-based network)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민성기반 네트워크는 시민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공이념을 함께 추구하는 연대적 네트워크를 말한다. 한국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의식이 성숙하는 계기를 맞이하였으며, 실제로 시민사회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등장함으로써 사회의 비판적 자기성찰 기제를 확보하게 된다. 시민성기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구조기반 네트워크에 편입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기여하면서도 거리두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에 앞서 이주노동자의 정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태경, 2005). 먼저 ‘이주’에 정체성의 방점을 찍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한국인들은 잘사는 나라의 이주자에 대한 태도와 못사는 나라의 이주자들에 대해 상이한 거리감을 갖는다. 이는 이주자를 ‘인종’의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동자’에 방점을 찍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노동자는 자본가와의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 즉 ‘계급’의 관점이 부각된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들이 이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네트워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계급에 초점을 맞추면, 노동자의 계급적 권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이태정, 2011; 정영섭, 2012). 인종에 초점을 맞추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추구하는 시민성기반 네트워크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전영평·한승주, 2006).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삶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노동관계법제의 개정이나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민주화 이후 꾸준히 성장해오던 두 개의 네트워크가 활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한국사회 전반에서 두 네트워크의 활력을 복원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노조활동을 약화시키는 노동관계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NGO나 NPO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의 활력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단단하게’ 접합될 수 있는 조건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성기반 네트워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시민적 연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기반 네트워크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경쟁자가 아닌 ‘공동운명체’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이 잠재적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처럼, 내국인 노동자가 잠재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처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연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연대에 기반 한 두 네트워크는 정치적으로는 정책네트워크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연대를 통해 우리는 원-근 프레임이 배제적으로 작동하는 거리두기로부터의 포용적 전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차별하기에서 공정하기로: 형평성의 내면화를 향하여

한국사회는 개인의 이익추구활동이 평등하게 보장된 사회이다. 자본주의의 생리상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대립적이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는 자본가의 경제적 강제가 작동하는 계층관계 혹은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다 보니 이익추구에 있어서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있는 자에게 더 유리한 차별적 성격을 갖는다. 게다가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어 이해관계가 갈등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노동귀족과 노동빈민이라는 노동자 내부의 계층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의 문제가 중첩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취업자와 실업자의 이해관계 역시 갈등을 일으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자본가-노동자의 계층구조는 자본가, 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의 계층구조로 세분화된다. 한국사회 전반에 구조화되고 있는 노동의 계층화는 이주노동자를 유입하면서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즉, 노동계층의 최하층에 이주노동자가 자리를 잡고 있다. 자본가 아래의 각 계층은 하위계층을 배제함으로써 상위 계층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계층적 특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경제적 차별의 구조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배제적인 차별하기를 극복하는 조건은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의 경제적인 이익의 분배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에 비해 자본가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다. 불평등한 분배구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당

장 중요한 것은 이익분배구조에서 배제된 사람들, 가령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한 공적 부조를 제도화함으로써 형평성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개연성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Sen, 2000). 그리고 이러한 공적 부조에 기초해서 자본가와 다양한 노동계층의 요구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 공정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노동정책의 큰 흐름이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때,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들을 개선해나가는데 경쟁적인 시기심에서 발동하는 반대의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차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복지정책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노동정책은 직간접적인 차별유발적인 법제도를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하나의 뮤음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전향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연대의 파트너임이 틀림없다.

이익분배구조에 있어서 상-하의 프레임이 차별하기의 배제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평등성과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성과 평등성은 복잡한 노동의 계층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V. 결 론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기 위해, 이글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적 반응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타자화하기, 거리두기, 차별하기가 배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정하기, 연대하기, 공정하기를 포용적 전환을 위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포용적 전환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적 반응의 문제를 이주노동자에 국한해서 풀어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배제적 경향성을 해소하는 큰 틀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바라볼 때, 보다 근본적인 해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큰 틀에서 접근한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적 경향이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기제가 발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글에서 살펴본 배제의 세 가지 양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양태는 한 얼굴의 세 가지 표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세 가지 양태의 상호관계를 입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셋째, 이주노동자의 배제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정부의 개입은 자유주의적인 중립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김성수, 2009). 기계적 중립은 기준의 배제현상을 온존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동등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보편적 인권의 이념에 따라 사람들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존중하고, 누구든 불우한 처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신이다(Rawls, 1971; Dworkin, 2002).

참고문헌

- 공수진·박민영·이동호. (2011).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공익과 인권」 9: 3-36.
- 김동노. (2010). 한국의 국가 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현상과인식」 111: 203-224.
- 김동춘. (1998).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시민과 세계」 1: 68-90.
- 김병조. (2011). 한국에서의 국제적 노동이동의 시기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해외취업 이출과 이주노동자 이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5): 2749-2775.
- 김상학. (2004).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 169-203.
- 김성수. (2009). 이주노동자 문제와 그 대안: 내재화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7(2): 229-255.
- 김영란. (2008).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용에 관한 연구. 「담론」 11(2): 103-138.
- 김현숙. (2006). 한말 ‘민족’의 탄생과 민족주의 담론의 창출: 민족주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5(1): 117-140.
- 대한상공회의소. (2012).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수요조사」 보고서.
- 민무숙. (2010). 이민자를 마주한 한국사회.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통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포럼자료집. 11-19.
- 박진경. (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9(3): 259-288.
- 박태경. (2005).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 「경제와 사회」 67: 88-112.
- 설동훈. (2002). 외국인 노동자, 현대판 노예이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18: 53-68.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9).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 유명기. (1995).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구조. 「녹색평론」 21: 69-82.
- 유명기. (2002). 외국인 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당대비평」 18: 12-35.

- 윤건차. (2002). 민족, 민족주의 담론의 빛과 그림자. 「황해문화」 35: 62-89.
- 윤윤규. (2010). 지난 30년간 한국 제조업의 노동투입 조정패턴의 변화. 「산업관계연구」 20(4): 57-86.
- 윤인진. (2007).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와 대안적 민족주의의 모색. 「한국사회」 8(1): 5-30.
- 윤인진 외. (2009). 「이주노동자의 한국경제 및 사회에 미친 영향과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보고서. 아시아인권센터.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 55: 143-190.
- 이상학. (2002).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비정규노동」 제12호.
- 이승환. (2004). 한국 가족주의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 가능성. 「유교사상연구」 20: 45-65.
- 이종범. (1986). 「국민과 정부관료제」.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태정. (2011). 이주노동자의 정체성과 노동조합. *Homo Migrans* 4: 31-57.
- 이한숙. (2004).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8).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42(2): 104-137.
- 이황직. (2002).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개념설정 및 개념사 연구. 「사회이론」 22: 331-362.
-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 장혜연. (2010). 한국에서의 국가-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과 그 결과. 「한국정치학회보」 44(3): 203-231.
- 전영평·한승주. (2006). 소수자로서 외국인노동자: 정책갈등 분석. 「한국행정연구」 15(2): 157-184.
- 정영섭. (2012). 한국의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는 가능한가. *Homo Migrans* 5: 65-84. (<http://www.homomigrans.com>)
- 정영훈. (1994). 한국사 속에서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2): 33-55.
- 조민. (1994). 「한국민족주의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조혜정. (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 79-96.
- 최병두. (2009). 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19-343.
- 한건수. (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9(2): 157-193.
- 한국노동연구원. (2007).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개발원.
- 한홍구. (2002).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서. 「황해문화」 35: 29-46.
- 허동현. (2009). 한국 근대에서 단일민족 신화의 역사적 형성. 「동북아역사논총」 23: 7-32.
- 황정미 외.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berson, C. L., Healy, M., & Romero, V. (2000). Ingroup Bias and Self-Esteem: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 157-173.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Amnesty International. (2009). 「일회용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 Anderson, B. (2003). 「상상의 공동체」, 윤형숙(역), 서울: 나남.
- Antonovsky, A. (1960). The Social Meaning of Discrimination. *Phylon* 21:81-95.
- Bloemraad, I. (2011). The Debate over Multiculturalism: Philosophy, Politics, and Policy. Migration Information Source(www.migrationinformation.org). 1-6.
- Blumer, H. (1960). Race Prejudice as a Sense of Group Position.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 3-10.
- Bonacich, E. (1972). A Theory of Ethnic Antagonism: The Split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5): 547-559.
- Brewer, M. B. (199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or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55: 429-444.
- Cameron, A. (2006).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Social Inclusion and Excep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3): 396-404.
- Durkheim, E. (2012). 「사회분업론」, 민문홍(역), 서울: 아카넷.
- Dworkin, R. (2002).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eagin J.R. and Eckberg, D.L. (1980). Discrimination: Motivation, Action, Effects, and Context. *Annual Review of Sociology* 6: 1-20.
- Freeman, G.P. (1995).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4): 881-902.
- Gray, K. (2004).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아세아연구」 47(2): 97-128.
- Hochman O., Rajzman, R. & P. Schmidt. (2008). National Identity and Exclusionary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in Two Ethno-National States: Germany and Israel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olitical Psychology, July 2008, Paris France
- Jackson, C. (1999). Social Exclusion and Gender: Does One Size Fit All?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11(1): 1265-146.
- Karakayali, Nedim. (2009). Social Distance and Affective Orientations. *Sociological Forum* 24(3): 538-562.
- Kymlicka, Will. (2012).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ture*.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www.migrationpolicy.org/transatlantic).
- Link, B.G. and Phelan, J.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 Linville, P. W. (1998). The Heterogeneity of Homogeneity. In J. M. Darley & J. Cooper(eds.), *Attribu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e legacy of Edward E. Jones*, 423-4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rtiniello, M.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인진(역), 서울: 한울.
- Olsen, M.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lous, Scott. (2003). The Psychology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An Overview, in Plous, S.(ed.), *Understand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3-48. New York: McGraw-Hill.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en, A. (2000).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nd Scrutiny*. Asian Development Bank.
- Simmel, G. (1908). The Stranger. in Donald N. Levine(ed.), *Georg Simmel On Individuality and Social Forms*, 143-149.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 Smith, Anthony D. (1991). *National Identity*. New York: Penguin Books.
- Staszak, Jean-François. (2008). Other/Otherness. Elsevier: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 Taylor, C. (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ylor, Michael. (1982).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Policy Orientation for the Social Accommodation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Euy-young Lim and Tae-hwan Kim

It is an indisputable fact that immigrant workers are rapidly increasing in Korea. The influence of immigrant workers on the formation of Korean society may be beyond imagination in the long run. Therefore,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make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policies for immigrant workers. This study suggests policy orientations for accommodating immigrant workers in Korean society. Three frames were first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interpreting responses particular to immigrant workers: an in-out frame in the dimension of the common idea of national community, a near-far frame in the dimension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n up-down frame in the dimension of social interaction. Possible responses are othering, based on an in-out frame, distancing on a near-far frame, and discriminating on an up-down frame. Secondly, the tendencies internalized in Korean society are cri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each frame.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policies covering immigrant workers be oriented toward systematic and consistent accommodation: from otherness to recognition; from distance to solidarity; and from discrimination to fairness.

【Keywords: immigrant workers, othering, social distance, discrimination, recognition, solidarity, fairness】